

제2주차: SD와 WSSD

학 습 목 표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SD)과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WSSD)에서는 WSSD의 개요와 주요 논의주제를 경제·사회분야, 환경·자원분야, 제도 및 이행수단 등으로 분류하여 논의한다.

*참고문헌 : WSSD 논의결과 분석 및 후속과제 도출(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2), WSSD 이행계획에 대한 국가대응전략 연구(대통령자문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03), WSSD 이행계획 환경분야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환경부, 2003)

<목 차>

제1장 WSSD 개요

제2장 WSSD 주요 논의주제

1. 경제·사회 분야
 - 가. 빈곤퇴치 및 지속가능한 삶
 - 나.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패턴
 - 다. 세계화와 지속가능발전
2. 환경·자원의 보전 및 관리
 - 가. 지속가능한 자연자원 관리
 - 나. 보전과 지속가능발전
3. 제도정비·이행수단
 - 가. 소도서개도국 및 아프리카 지원
 - 나. 이행수단
 - 다. 거버넌스(governance)

제1장 WSSD 개요

2002년 9월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WSSD)에서는 경제성장, 환경보전, 사회복지의 조화를 추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각 국가가 이를 21세기 국가발전전략의 기본방향으로 채택하도록 권장함으로써 경제, 환경, 사회정책의 기본지침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WSSD가 열리게 된 배경은 197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 서유럽 정계·재계·학계 인사 모임인 '로마클럽'이 '성장의 한계'라는 책에서 산업화·소비·인구증가가 인류 성장을 한계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 해 6월 UN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인간환경회의를 소집하고 '인간환경선언'을 채택했으며, 이 선언을 기초로 유엔환경계획(UNEP)이 설립되었다. 그러나 지구온난화·오존층 파괴·생물종 감소·사막화 현상 등 지구환경문제가 심각해지자 UN은 인간환경회의 20주년을 기념해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지구정상회의를 개최하였다.

1997년 제19차 유엔환경특별총회에서는 1992년 리우회의에서 채택한 리우선언 및 의제 21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난 10년간의 추진실적을 종합평가하고, 2002년 이후 지속가능발전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리우회의 10주년이 되는 2002년에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인류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가 지속가능한 발전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인류는 경제발전만을 추구하는 오류에서 벗어나 환경보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노력을 경주하였다. 특히 1992년 리우 지구정상회의는 이러한 맥락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번 WSSD에서 구체적으로 제기된 빈곤문제는 그동안 진행된 경제발전과 환경보전에 대한 논의에 전지구적 차원의 사회보장이라는 새로운 축을 부각시키는 기회가 되었다. 즉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자각은 별개의 문제로 하더라도 빈곤의 문제가 환경파괴와 오염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으며 또 문제 극복에 대한 핵심적인 제약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자각이라 할 수 있다.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발전이 필수적인데 경제발전은 환경파괴와 오염을 수반할 우려가 있으며 그렇다고 경제발전을 포기하면 빈곤으로 인한 환경파괴와 오염을 불가피하게 초래하게 된다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이러한 빈곤을 포함한 사회보장과 환경보전, 경제발전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딜레마에 대한 대안이 지속가능한 발전이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 환경, 사회 요소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면서 발전하고 번영하기 위하여 미래세대의 삶의 질과 자원을 감소시키지

않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 그러나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요소들은 지속가능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런 바람직하지 않은 경향을 바꾸기 위해서 시급히 진로를 변경해야 하는데 지연이 되면 될수록 해결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

우리나라 지속가능발전 전략은 삶의 질이 높은 복지사회의 추구를 위하여 경제·사회분야 모든 정책에 환경비용을 적절하게 반영하면서 환경적 고려를 각 분야별 계획에서 의사결정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1992년 리우 지구정상회의 이후 국내 환경대책이 강화되었을 뿐 아니라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대책도 본격적으로 추진되었고, 1996년의 OECD 가입으로 환경정책의 체계가 선진국과 같은 구조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1997년 말에 찾아온 외환위기와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사회적 측면의 지속가능성 문제가 다시 대두되게 되었다.

제2장 WSSD 주요 논의주제

1. 경제·사회 분야

가. 빈곤퇴치 및 지속가능한 삶

빈곤퇴치문제는 경제발전의 기본조건이면서 환경보전의 장애요인이라는 점에서 지속가능발전의 핵심적 사항이며 최우선 과제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이점에는 선진국과 개도국이 공히 동의하고 있고 UN에서도 우선적 과제로 삼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농촌 빈곤인구를 현재수준인 75%에서 2025년까지는 현재의 60%로 줄이고자 하는 프로젝트가 추진 중에 있으며, 그밖에도 2000년 「밀레니엄 선언」에서도 하루 1달러 미만의 수입인구를 2015년까지 반으로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을 합의하였다.

WSSD 준비회의에서는 빈곤퇴치를 위한 이행수단으로써 빈곤층의 에너지 접근성 제고, 농촌의 빈곤해소, 사막화 방지, 담수자원의 공급문제 등 관련부문과의 연계강화와 주거 및 보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등이 주로 논의되었다. WSSD를 위한 UN 사무총장 보고서에 따르면 빈곤을 도시빈곤 및 농촌빈곤으로 구분하고 전자의 경우 인간정주(human settlement)의 문제로, 후자의 경우 지속가능한 농업과 식량안보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농촌빈곤의 탈피수단으로 제기된 지속가능한 농업 및 농촌의 발전(Sustainable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 SARD)을 위하여 토지이용, 벌채, 사막과, 용수 및 관계시설, 생물다양성, 생명공학을 포함한 다양한 요소들의 전환을 모색하였으며, 도시빈곤 역시 심각한 아프리카와 중남미의 문제해결 방안을 중심으로 해결책을 논의하였다.

WSSD 본회의에서는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지원 확대에 의견 접근이 이루어져, 회의에 참가한 각국 대표들은 "빈곤과 저개발이 편중된 개도국들에 대한 선진국들의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고 의견을 모으고, 개도국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부문에서 합의에 접근하였다.

우리나라는 1997년 말에 불어 닥친 IMF로 인해 99년 기준으로 빈곤율이 96년에 비해 2배정도 증가하였으나 현재는 IMF 이전 수준으로 다시 감소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에서의 절대빈곤계층이라 할 수 있는 생활보호대상자수의 연도별 추세를 살펴보면 점차 감소하고는 있으나 아직도 생활보호대상자 수는 99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100만명을 상회한다.

빈곤층의 기본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해 2000년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제도의 정착이 안 되어 부정수급자가 있는가 하면, 보호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정부차원에서는 2001년 ‘중산층 육성 및 서민생활 향상’을 위한 10대 중점 추진과제를 설정하면서 실질적인 보완이 예상된다.

빈곤의 원인을 실업으로 볼 때, 장기적으로는 가정불화, 아동학대, 여성학대, 노인의 방기 등과 같은 사회문제를 수반한다. 소년소녀가장의 문제의 경우, 소년소녀가장의 수는 1990년부터 1997년까지 증가추세에서 1998년과 1999년에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향후 지속적인 감소추세가 이어질 지에 대해서는 예의 주시하여야 한다.

국가예산에서 사회보장예산은 약 10% 차지하고 있다. 1990년부터 1999년까지 사회보장예산이 국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7% 사이였으나 2000년에는 9%로 증액되었고, 1994년부터 농어촌지역의 열악한 보건의료의 공급기반의 확충을 위해 보건소의 노후시설 및 장비의 보강사업을 추진하였다.

우리나라의 향후 빈곤대책의 목표는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고려하여 단기적으로는 절대빈곤인구를 감소시키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소득불균등의 격차를 줄여 상대적 빈곤을 감소시키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1) 농업 및 농촌개발

현재 우리나라의 농업과 농촌의 현황은 지속가능성의 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농약과 화학비료의 과다사용으로 농촌의 토양과 수질오염이 악화되고 있으며, 생활환경과 소득수준저하에 의한 인력유출로 동공화 현상이 발생해 영세한 가족농체제의 농업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이 같은 상황으로는 대규모 기업농체제인 농산물 수출국과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정부정책의 관점에서 그 간 다양한 시책을 통하여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왔으나, WTO의 개방화에 대비하기 위한 정부정책은 결과적으로 농가의 과잉투자과 부채누증, 환경오염을 유발하였고, 가족농이 지향해야 할 다 품종소량 및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의한 품질경쟁력위주의 시장화 유도에 미흡하였다. 그 간의 법체계 정비를 통하여 의제 21의 기본정신을 법에 반영하여 법체계 자체는 선진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그 실효성 측면에서 여전히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95년 이후 국토이용관리법상 농경지가 농림지역과 준농림지로 구분됨에 따라 농촌지역의 난개발이 발생하기

도 하였다.

결과적으로 WTO라는 경쟁체제와 환경보전과의 조화 속에서 우리나라 농업 및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다 획기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식량공급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경지정리·용수개발·관개개선·공간·간척 등을 위한 노력과 환경보전사이의 사회적 조화가 필요하며, 환경친화적 농업을 위한 유기농의 확대와 이에 따른 고품질화 노력이 가장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한정된 자원과 토지의 상황 하에서 우리나라의 식량안보와 환경친화성을 담보하기 위한 농업과 축산업의 적정 분할(Portfolio)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 한국의 농업은 내·외부적인 요인들에 의해 그 존립기반을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며, 기존 정부의 대책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후속추진과제를 검토해 볼 수 있다. 지속가능한 농업도 역시 환경과 경제, 그리고 사회문제의 통합을 통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현실성 있는 장기 기본계획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의 추진을 위한 중·단기 전략들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규모의 농업, 경쟁력 있는 농업, 그리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농업이어야 할 것이다.

2) 인구변화와 지속성

지난 수십 년 동안 인구와 환경관련 정책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진행되고 있으며, 인구-빈곤-환경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지방차원에서 정책결정자는 이러한 환경과 인구사이의 관계를 잘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보건과 후생, 교육 등과의 관계도 고려하여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NGO활동과 대중매체를 통하여 환경-인구문제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특히 환경과 지속가능한 인구의 관계를 보다 쉬운 언어로 설명하여 교육하고 계몽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대수명이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이는 체계적인 인구정책과 연동하여 추진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성하는 조건이 된다.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는 인구변천의 마지막 단계인 후기 균형상태에 진입하고 있으며 저출산이 지속됨에 따라 인구노령화, 노동력 공급둔화, 학령인구감소 등 새로운 인구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산업화와 함께 도시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농촌인구의 탈농현상의 심화로 점차 공동화되어가는 추세이며,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각종 인구문제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경제문제에 적절히 대처하여 인구와 환경보전, 그리고 경제발전의 연계성을 고려한 정책의 개발이 요구된

다.

나.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패턴

이번 WSSD 논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최대의 요인으로 경제활동 즉 생산과 소비가 자원 낭비적이고 환경 파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점에 합의를 보았다. 따라서 생산과 소비 패턴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패턴은 특히 에너지 분야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소비 및 생산패턴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제시된 이행수단은 각종세제, 보조금 등 시장 메커니즘에 바탕을 둔 방식의 채용, 구매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구매행동을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인증제도 도입, 생산과 소비의 생태적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시책 시행 등이다.

에너지 부문에서는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패턴을 달성하기 위한 과제로서 연료 원별 대책 수립, 에너지 기술개발, 보조금의 정비, 산유국 및 소비국간 협력 등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제9차 유엔지속가능발전위원회(UNCSD-9)¹⁾에서의 에너지 관련 결의에 대한 지지를 천명하였다.

1) 소비 및 생산

소비에 대한 결정은 종종 복잡한 정부정책의 수립과 제도적 배치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들은 환경적인 다른 정책 수단들을 포함하는데, 예컨대 경제적 도구들과 소비자 가격에 외부 환경적 영향을 연계시키는 것과 함께, 상이한 소비패턴을 제한하거나 최소 생산기준을 선정하는 규제수단을 포함한다. 거시경제정책과 환경적으로 의미 있는 소비패턴의 규모 및 구조와의 연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지속가능한 소비는 천연자원과 독성물질의 사용, 폐기물과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미래세대의 필요량에 위협을 가하지 않고 기본적 필요량에 대해 만족시키고 더 나은 생활을 가져올 수 있는 물질과 서비스의 소비를 의미한다. 즉 지속가능한 소비는 현재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동시에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며,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생애순환 관점에서 평가하며, 형평성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는 등 핵심요소를 함께 묶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최근의 물질흐름(Material Flow)은 많은 오염, 자원고갈, 에너지소비, 생물다양성

1) 제9차 유엔 지속가능발전위원회(2001년 4월)에서 채택한 에너지 부문에 관한 결의안은 개도국의 전력 등 에너지 보급 확대, 에너지 기술이전, 에너지 관련 보조금의 점진적 철폐 등을 규정하고 있다.

과 자연경관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품과 서비스 등의 전생애 순환으로부터 오는 손실의 강도를 최소화시켜야 한다.

소비형태의 변화를 유도하는 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개발도상국에서 생활수준의 효율적인 향상을 추구하는 동시에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소비형태의 변화를 추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화와 새로운 정보기술의 발달은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을 가능하게 할 수 있으나 이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한다.

지속가능한 소비형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소비문화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현대의 물질적인 소비문화에 대응하여 정신적인 가치에 바탕을 둔 소비문화의 창출을 도출하는 동시에 과도한 광고, 상대적 빈곤감, 과소비 등 시장소비경제의 문제점 개선도 중요한 정책과제라 할 수 있다.

우리사회의 생산 체계를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것으로 개편해 적은 환경요소의 투입으로 보다 많은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는 생태효율(Eco-efficiency)이 높은 사회경제체계를 조기에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유연한 산업환경규제의 확립이 필요하다. 쾌적한 환경수준이라는 기준은 유지하되, 이를 달성하는 수단에 대하여는 민간부문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야 한다. 정부가 설정한 환경기준을 달성하는 수단의 선택에 민간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자율규제 형태의 환경규제나, 경제적 규제를 확대하여 환경개선효과는 높이고 기업의 부담은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비용최소화계획원리(Least Cost Planning: LCP)에 의거한 수요관리를 확대한다. 비용최소화계획원리는 예상되는 자원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새로운 자원공급시설의 개발보다 더욱 저렴한 전략을 발견할 수 없었을 때에만 새로운 공급시설의 개발을 허가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절약에 대한 투자가 새로운 공급시설 확충보다 훨씬 이득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입증되고 있다. 때문에 이럴 경우 에너지 공급주체가 최종소비자인 가정이나 기업에게 자원을 절약하도록 후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장기적인 차원에서의 정책을 보면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패턴으로의 전환을 위해 다양한 대책들(1회용품 사용억제, 쓰레기종량제, 과다포장 제한 등)을 장기적인 차원에서 실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한 부문의 노력이 아닌 정부, 기업, 민간단체, 국민들의 동참에 의해 이루어짐을 강조하면서 보다 구체적인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 홍보차원에서는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권장하기 위한 대책들의 성과와 함께 실행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한 기술개발과 소비패턴의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 강조해야한다. 또한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경향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환경친화적 조세체계의 구축도 필요하다. 21세기에는 노동이라는 생

산요소가 전 세계적으로 과잉요소로 변화될 전망이다 반면 자연은 갈수록 희소한 재화가 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으로 노동의 가격을 낮추고 환경과 자원의 가격을 높이는 전반적인 조세개혁을 검토하여야 한다. 환경친화적 조세개혁은 조세에 따른 경제전반에 걸친 자원배분의 왜곡현상을 줄이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2) 지속가능한 에너지

우리나라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와 관련하여 국제사회가 요구한 기본적인 사항을 국가정책으로 이미 전반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산업구조개편(민영화와 경쟁도입)이 진행 중에 있으며, 대체에너지의 보급촉진을 위하여 현재 관련법을 개정 중에 있다. 또한 에너지효율화 및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하여 새로운 거버넌스(governance)가 생겨나고 있다. 정부와 협력 하에 200여 시민단체가 참여하여 전국적인 연대구조(에너지절약시민연대)를 통하여 에너지효율화사업에 참여중이며, 서울시는 처음으로 에너지조례를 제정하고 운영해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다른 지자체에 파급할 계획에 있다. 이는 대단히 전향적인 새로운 거버넌스(governance)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에너지효율화와 관련하여 가격적정성(환경비용내부화 등) 및 유해보조금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에너지가격은 유류가격을 중심으로 향후 6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하기로 하였으며, 구조개편 이후의 전력가격에 대하여는 아직 그 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상태이다. 유해보조금(전력산업기반기금, 에너지특별회계, 교통세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부족한 상태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절약 잠재량이 수송부문과 건물부문에 많이 있으므로, 이에 따라 산업구조뿐 아니라 사회구조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며, 특히 수송부문의 효율화는 기후문제, 대기보전문제, 에너지효율화 노력에 공히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하는 부문이다.

지속가능한 에너지시스템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경제주체의 에너지절약행위가 자신의 합리적 경제행위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유도되도록 경제시스템, 즉 에너지가격구조를 개편하고 에너지절약행위에 대한 가격외적인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의 에너지절약행위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환경친화적 조세체계 개편을 위해 최소한 세수중립(revenue neutral) 원칙하에서 대기오염의 사회적 비용 내재화로 인한 세수증대분 만큼 타 조세를 감면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도덕적 해이 해소를 위한 에너지비용 부과 시스템의 구조적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 세계화와 지속가능발전

세계화는 다면적인 과정으로서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공히 가지고 있으므로 적절한 관리 혹은 대응이 될 경우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WSSD 의 논의는 세계화의 추세를 인정하되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하여 세계화가 빈곤의 재생산을 방지하고 환경보전에 기여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에 긍정적인 동인으로 작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자유무역의 확대와 직접투자의 촉진, 개도국의 선진국 시장접근 제고와 선진국 자본의 개도국 투자 장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세계화에 대한 기본적인 평가에 대하여 국가 간 상당한 이견이 존재했다. 미국은 세계화가 하나의 대세로서 관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우리나라와 EU 등은 급격한 단기자본의 이동성으로 인한 유동성 위기의 발생을 예방하고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였을 때 국민경제의 지속가능성에 손상이 가지 않는 방식으로 대처하는 방향으로 국제 금융체제를 개선하기 위한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2. 환경·자원의 보전 및 관리

가. 지속가능한 자연자원 관리

WSSD에서 지속가능한 자연자원 관리는 담수자원·대기 및 기후·사막화 방지·생물 다양성 및 생물자원부문·산림생태계부문으로 구분되어 논의되었다. 산림생태계부문은 숲과 산지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실행하기 위한 유엔산림포럼 등 기존 여러 국제협약과 프로그램의 내용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이루어 졌다. 산지생태계의 보전, 지속가능한 산지농업 및 임업, 산지공동체의 의사결정 참여 등이 제안되었으며, 여러 이해당사자간의 대화, 다자 및 양자간 협력 등도 강조되었다.

대기 및 기후 부문에서는 일반적인 대기환경 보다는 기후변화협약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논의되었으며, 이행계획으로는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의 인정, 관측 및 감시체계 구축, 기후변화관련 개도국 지원, 대기오염문제에 대한 국제적 대처체제의 개발, 월경성 대기오염문제 및 오존층 파괴물질에 대한 대처방안 등이 제기되었다. 주요 쟁점 중 하나는 교토의정서의 비준 및 발효 문제에 대한 입장의 차이로, 미국은 국내정책상 교토의정서의 비준이 불가능함을 설명하고 기후변화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으로써 시장원리를 강조하는 유연성체제(flexible mechanism)와 기후변화의 방지보다는 기후변화가 발생할 경우의 대처방안인 적응전략(adaptation strategies)의 적극적인 채택을 주장하였고, 호주와 러시아 등도 2002년까지 기후변화협약을 발효하도록 한다는 문안의 삭제를 요구하였다.

사막화방지의 경우 아프리카 중국 등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 생태계를 위협하고 인간의 생존조건을 위협하고 있는 사막화를 방지하기 위한 대처방안에 초점을 둔 논의로서 특히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 Conservation on Combating Desertification: UNCCD)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구환경기금(Global Environment Facility: GEF)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 부문에서 생물다양성은 생물종의 다양성과 생태계의 안정성이라는 점에서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며 생물자원 문제는 유전자 등 생물학적자원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과 관련된 사항이다. 이와 관련된 이행수단으로써 생물다양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목표가 제시되었으나 그 내용은 기본적으로 생물다양성협약 등 기존의 협약들을 확인하는 차원이었다. 이외에도 여러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방식의 멸종위기 동·식물종의 보전방안과 유전자원에 대한 지적재산권 부여 문제와 관련한 논의, 생물자원에 기반을 둔 전통지식에 대한 지적재산권 부여문제, 그리고 유전물질과 관련한 혜택의 형평성 있는 배분문제 등이 제기되었다. 쟁점사항으로는 유전자와 관련된 지적재산권 문제에 관하여 개도국 측은 유전

자원에 대한 현지국의 지적재산권을 주장한 반면, 선진국 측은 관련논의가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서 진행되고 있는 점을 들어 이에 대한 언급을 반대하였다. 담수자원은 빈곤퇴치를 위한 경제성장에 필요하며 인체보건과 복지에 필수적인 자원이므로 효율적인 담수자원의 관리를 위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세부내용으로 지속가능한 수자원의 관리 및 형평성 있는 이용을 추구하고 담수자원에의 접근 제고를 위한 방안개발(밀레니엄 선언의 내용 관련)과 공유 수자원에 대한 지역 및 국제협력 등이 있다.

1) 산림자원

우리나라는 국토의 2/3가 산림인 전형적인 산악국가이므로 국토의 지속가능한 이용보전을 위해서는 산지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다. 특히 국가적인 물부족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가장 환경 친화적인 방안으로서 산림은 물공급의 가장 항구적인 수원함양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산림은 대기보전, 생물다양성보전 등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므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산림부문에 있어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인정될 수 있으나 산촌지역사회의 구축에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개발정책은 경제적 효율성이 높은 도시중심의 공업우선정책으로 농촌 산촌의 지역경제의 균형적 발전에는 미흡하였으며, 높은 인구유출, 지리적 험준성, 입지적 벽지성 등으로 인한 빈곤 상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산지 및 산림자원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함과 동시에 경제적, 환경적으로 건전한 자원으로 육성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체계 구축하고, 산림의 생산력을 유지증진하고, 생물다양성의 보전, 산림환경기능의 제고와 산림자원의 주기적인 평가감시를 통해 산림생태계의 관리 및 관리체계 강화해야 한다. 임산물에 대한 생산, 가공, 유통, 판매 등 제반 여건을 개선하고 산림자원의 효율적으로 이용해 산촌지역사회의 발전을 담보하고, 황폐지복구 및 생태계보전으로 토지생산력을 유지·증진시키면서 자연생태계의 안정화 도모해야 한다. 또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효율적 제도정비와 지구적 차원의 산림보전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2) 대기보전

대기오염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염원의 배출단계에서의 규제보다는 다른 관련 정책과의 조화운영이 필수적이다. 에너지연료의 적정 선택과

에너지절약을 위한 에너지정책의 강화, 도시화에 대한 적정화를 위한 국토개발계획의 선진화, 교통정책에서의 수요관리기능 강화 등이 다차원적으로 조화롭게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오염방지노력도 규제방식 일변도에서 보다 다양한 방안모색으로의 전환을 위해 시장기능의 강화 (연료가격에서의 환경비용 내부화 노력, 배출부과금의 적정화 등), 기술개발을 통한 연소단계에서의 기술적 해결방안(후처리기술의 개발 및 BAT에 대한 적극적인 인센티브 제공 등)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도시대기 오염방지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협력이 특히 중요한데, 대기질 지표관리기능의 강화 (현재 지표로 활용중인 오존, SO₂, Nox 등 이외에 다양한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지표화 작업이 필요) 지표관리를 위한 도시내 정부, 시민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도시별 대기질 목표지표의 설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정부 이외의 단체(지속가능발전위원회, 지방자치단체, NGO, 기업 등)의 이행과제 및 상호 참여와 협력강화 방안을 반영해야한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통해 타 부처간 협조 및 조정이 필요한 과제(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 도시교통체계개선 등)의 이행능력 강화하고, 시민참여프로그램(카풀, 대중교통이용, 자전거이용 활성화, 에너지절약 등)을 개발·추진해야한다.

WSSD 이행계획에서 제시된 권고사항의 충실한 이행, 그동안의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국가실천계획을 수정·보완해 성층권 오존과피 방지를 위한 계획내용 반영하고, 불확실성 규명을 위한 실천계획(수용체 중심의 대기오염 건강위해성평가, 오존생성 메커니즘 규명, 배출 재고(emission inventory) 구축 등)를 추가·보완해야한다.

후속추진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추진목표를 수치화(GDP 증가율 대비 온실가스, SO₂, NOx, PM₁₀, VOCs 등 배출증가율)하고 목표 달성시기를 명시하고, 추진목표를 계획추진의 평가지표로 활용하여, 주기적으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실천계획의 보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사막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막화 현상이 직접적으로 관찰되고 있지는 않고 있는 상태이며, 그 간의 성공적인 산림녹화사업으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고, 화학비료남용과 산업오염물질 등에 의한 토지오염방지 노력 등도 부족하나마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중국 몽골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막화는 직접적으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국제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다양한 정부간 민간간 협력사업이 전개되고 있으나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4) 생물다양성

종다양성, 생태계의 존재, 유전자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물다양성 유지가 필수적이다. 자연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보호지역이 다양한 형태로 지정되어 꾸준히 증가되어 왔다. 이는 자연보호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책적인 의지가 반영되어 많은 나라들에서 보이고 있는 현상이다. 특별히 지정한 생태계보전지역이 그 규모는 작지만 실제 시행되고 있고, 일정수준 이상의 개발제한구역이 항시 유지되고 있다.

지속가능성의 차원에서 보았을 때 자연그대로의 상태를 유지하려는 노력들이 다각도로 전개된다는 면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생물다양성은 살아있는 유기체들 사이의 다양성으로 정의되는데 이런 연유에서 유전적인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야생동식물의 멸종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강조되고 있다.

멸종위기의 야생동식물 수는 그 추세를 판단하기에는 자료의 수가 부족하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그 비율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런 멸종위기는 산림 등 주요 생태면적의 감소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의 산림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산림의 감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활동에 의해 보호될 수 있는 생태계지역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멸종위기는 산림 등 주요생태면적의 감소에 기인하며 지속가능성과 여러 측면에서 연결되어 있으므로 다른 정책과 연계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인간의 여행이나 상거래 도중에 유입되는 외래생물종의 증가로 이들이 정착하고 나면 기존의 생태계 질서가 어지럽혀지는 경우가 많다. 많은 경우 이들에게는 천적 관계가 없어서 그 수가 급증하게 되며, 현재 그 위험성이 심각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는 종은 황소개구리, 블루길, 배스 등 3종이지만 이는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또 다른 위험 외래종이 없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법제화 과정을 통하여 생물다양성 협약정신이 반영되고, 이후 이에 대한 관리기반이 강화되는 성과가 있었으나 현재까지의 이행성과는 제도 관리차원의 기반이며, 실행에 기초한 구체적인 성과는 향후 노력을 통하여 확보해야하는 과제로 판단된다. 생물다양성을 위해서는 종 및 유전다양성, 생태계다양성 등을 실질적으로 보전 관리할 수 있는 실행력에 기초한 노력이 필요하며, 현재 추진중인 생물자원보전관은 생물다양성 협약의 정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설립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생물다양성협약에 가입한 나라로서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생존에 대한 보다 각별한 관심과 향후 실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범지구적인 차원에서 생물다양성 유지를 위한 국가차원의 노력과 함께 선진국들은 보전관리 기술의 지원을 촉구해야한다. 특히 월경성 동물의 서식지 유지를 통한 이동네트

워크 구축을 위한 국가 간의 협력체제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최근의 LMO 부작용으로 발생하는 생물종 개발에 대한 주의를 위하여 국내에서도 조속한 법령 체계 및 위해성 평가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5) 해양수산자원

WSSD 이행계획 협상에서 해양어업에 대해 무역왜곡적인 어업보조금 폐지가 주 쟁점사안이었다. 특히, 선진국들은 불법·과잉조업을 조장하는 수산보조금을 없애자고 주장하였는데, 한국과 일본 등의 국가는 이를 반대하였다. 최종 이행계획문에 이 문제가 추가되므로써 앞으로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또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넘나드는 어족에 대해서는 개도국에 자원을 우선 할당하는 방안도 추진되었다. 이에 대한 대책과 후속과제에 대한 구체적 접근은 구상하기 어렵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해양수산관리를 위한 목표로서 청정해양환경 조성 및 습지 등의 연안역보호를 통한 국민의 건강 증진, 해양환경 및 해양생물자원 보호,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공유할 수 있는 수산자원 보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해양 연구를 통하여 해양 및 그 변화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 증진 등을 제고해야 한다.

6) 담수자원

21세기 우리나라의 수자원 관리는 공급위주의 패러다임을 탈피하여 지속가능성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모두 고려하는 종합적(holistic) 관리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우선 수자원은 사회적, 경제적 상품인 동시에 그 중요성에 반해 대체가 불가능하며 유한한 자원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인식 하에 물의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경제성과 환경성을 모두 고려하는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를 지향해야 한다. 물론 수량과 수질을 분리하지 말고 이들을 연계하는 통합적인 수자원 관리가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안정적인 물공급을 우선시 하는 기존의 관점에서 탈피해 국민들이 부족함 없이 안정적으로 깨끗한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수자원 관리의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 즉, 안정적인 물공급은 물부족에 대처하는 다양한 방법들 중에 하나이며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는 사실을 공식화해야 한다. 다음으로 사전적(ex ante)으로 모든 대안들의 경제성과 환경성을 엄밀히 검토하여 물부족을 해소하는 다양한 방법들 중 최선의 방법을 선정해야 한다. 즉, 수요관리를 고려한 물

수요추정에 근거해서 수요예측을 하고, 환경적이며 생태적인 영향과 사회적인 파급 효과 등을 모두 고려한 경제성 평가를 통해 최적의 대안을 선택해야 하며, 경제성 평가에는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효과가 반드시 정량적(quantitative)으로 계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수자원 관리는 부족함이 없는 양질의 물이용에 초점을 두고 이의 충족에 있어 국민의 후생(welfare)과 환경적 건전성, 경제적 타당성, 그리고 사회적 용인성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나. 보건과 지속가능발전

건강은 지속가능 발전의 핵심요소로서 빈곤 및 환경오염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환경오염에 따른 보건악화와 AIDS 문제의 우선적 해결방안을 주로 논의하였다. 개도국 측은 공중보건과 의약품에 대한 접근이 개선되어야 함을 지적하면서 WTO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의 유연한 적용을 주장하였으나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WTO의 도하개발아젠다의 문안에 충실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AIDS·말라리아 등 질병의 퇴치를 위한 추가적인 재원을 조성하자는 개도국의 주장에 대하여 미국, 일본 등은 기존의 기금을 사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WHO의 데이비드 나바로 지속가능발전국장은 "현재 3백억달러 수준인 개도국의 보건예산을 6백억달러로 늘리면 8백만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추가 보건예산은 에이즈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아프리카와 빈곤층 비율이 높은 아시아 지역을 지원하는 데 주로 사용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유소년의 건강상태와 영양상태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초가 되므로 현재 영양 상태뿐만 아니라 장기간의 영양 불균형과 영양부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영아사망률은 의료혜택에 대한 형평성을 나타내며 이의 감소는 의료기술의 발전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이 추구하는 삶의 질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으며, 이를 나타내는 다른 잣대인 기대수명의 증가는 세계적인 추세로 되고 있다. 인구정책이 동반되지 않은 기대수명의 증가는 평균연령의 증가를 의미하고 이는 또 전체인구의 증가, 고령인구의 증가 등 많은 부수적인 문제들을 야기하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3. 제도정비·이행수단

가. 소도서개도국 및 아프리카 지원

소도서개도국은 기후변화 등 환경적으로 취약하며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세계적인 경제발전에서 소외되어 지속가능한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이 필요하다. 소도서개도국의 지원과 관련한 쟁점사항으로서는 지속가능한 어업관리를 위한 지역적 어업관리 기구 및 협정에 대한 지원 문제가 있었으며 한국과 일본은 서부 및 중부 태평양 고도회유성 어족자원의 관리 및 보전에 관한 협정에 관한 언급의 삭제를 주장하였으나, 뉴질랜드 사모아 등은 이에 강력히 반대하였다. 아프리카는 세계화의 이익을 향유하는 데에 뒤쳐져 있으며 빈곤심화 등으로 고통받고 있으므로 이의 해결을 위한 지원의 당위성에 대하여 모든 국가가 공감하였다.

WSSD에서는 소도서 개도국과 아프리카는 소외, 지형적 분포, 고립 등 경제적, 환경적 취약성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있으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이 핵심 이슈 중 하나로서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이들 나라에 대한 우리나라의 지원으로서 재정관련 이슈들에 대한 재정부 등의 관계부처의 대응 전략과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기술이전의 경우 개도국으로의 기술이전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국제적으로 높은 기술 수준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IT기술의 성과와 높은 인력수준을 바탕으로 국내기업들이 개도국으로의 기술이전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이행할 수 있는 정부차원에서의 제도개선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나. 이행수단

재원문제에 관한 논의는 몬테레이 합의의 내용을 고수하려는 선진국 측과 이를 토대로 보다 구체적인 공약을 받아내려는 개도국 측과의 이견이 있었다. 개도국 측은 의제21의 이행을 위한 새로운 신탁기금의 창설을 주장하였으나 선진국 측은 이에 대체로 반하였고, 개도국 측은 서문에서 재원문제를 염두에 두고 신규 및 추가 재원 (new and additional resources) 관련, 리우선언의 공통의 차별화 된 책임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 개념을 명시하고자 하였으나 반대에 부딪혔다. 또한 개도국 측은 ODA를 2010년까지 GNP의 0.7% 달성한다는 목표시한의 설정을 주장하였으나 선진국은 이에 반대하였다. 개도국 측은 과다채무국의 구체문제를 결정한 HIPC (Highly Indebted Poor Countries)²⁾ 이니셔티브의 조속

한 확대를 주장하였으나 선진국 측은 여기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했다.

무역의 경우, 무역이 지속가능발전의 재원조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데에는 대부분의 나라가 동의하였다. 그러나 개도국 측은 시장접근, 특별하고 차별적인 대우, 무역장벽의 제거 등에 대하여 주장하였으며, EU는 개도국에 대한 기술지원과 양허적 무역체제를 강조하였고 일본, 미국 등은 도하 개발 아젠다의 합의사항을 강조했다. 관세 인하, 환경에 유해하고 무역 왜곡적인 보조금의 제거, 개도국 제품의 시장접근 제고, ILO의 핵심 노동기준의 적용문제, 환경과 무역협정의 연계 문제 등이 논의되었다. 환경적으로 유해하고 무역을 왜곡시키는 보조금 폐지 문제와 관련하여 EU는 이를 적극 지지하였으나 한국과 미국은 점진적인 철폐를 주장하였으며, 우리나라는 보조금과 관련하여 다른 부분도 동시에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국가별 특수상황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함을 주장하기도 했다.

기술이전에 관한 논의에서 개도국 측은 지속가능발전의 달성을 위하여 환경기술의 이전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하여 별도의 제도와 지적재산권의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선진국은 이에 반대하였다. 개도국 측은 환경친화기술의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체제의 설립을 주장하였으나 선진국 측(미국 및 일본)은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의 청정기술 프로그램 등 기존체제의 활용을 강조하였다. 또한 환경친화기술에 대한 개도국 접근 촉진에 관하여 선진국은 민간부문의 보유를 이유로 곤란함을 표시했다. 우리나라는 기술이전분야에서 공공부문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도국 측의 토착 및 전통지식에 관한 특허 부여 주장에 관하여 주요 선진국 및 한국은 이 주제가 현재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에서 논의되는 사항임을 들어 삭제를 주장하였다.

1) 환경과 개발의 통합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는 지역 환경개선과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해 정보교류, 상호협력,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고 각 지자체의 지방의제21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수평적 연계망(network)의 역할을 위해 1995년에 결성되었다. 2001년 6월 31일 현재, 우리나라는 248개 지방자치단체 중 60%인 149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제21을 수립하였으며 그 중 19.4%인 48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제21을 수립 중에 있어 79.4%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제21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HIPC 이니셔티브: 2000년 11월을 기하여 IMF와 World Bank는 세계 24개 최빈부채국에 대하여 부채완화조치를 취하였으며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사회지표, 환경지표, 경제지표, 제도지표 항목별로 2001년에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까지는 국가성장의 척도로 사용하던 GDP 혹은 GNP에 환경자산을 고려한 새로운 계정체계에 대한 연구가 국내적으로 94년부터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동북아환경협력을 위한 노력은 아직 가시화되지는 않았지만 한·중·일 3국은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 및 황사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경제·사회·환경을 통합하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의 틀을 제시함으로써 미래세대를 위한 보다 나은 삶의 터전을 제공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기여하고자 2000년 9월 20일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Presidential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PCSD)가 발족되었다. PCSD는 정부내 개발과 환경 관련부처의 장관들 및 실무국장들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자발적인 참여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제도적 책임은 없다. 이에 현재는 환경부를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고 민간부문의 참여 및 소속 위원들의 구성도 환경분야 쪽으로 치우쳐 있어 개발과 환경의 균형 있는 조화가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이므로, PCSD가 본연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부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지구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은 환경뿐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종합적인 차원에서 접근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인식수준이 아직도 환경에 국한한 지속가능발전에 머물러 있으므로 인해 포괄적인 방향에서의 국가 및 지구의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데 한계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수정노력이 필요하다.

환경과 개발의 조화는 국가정책은 물론, 각종 개발부처와 환경부처들이 내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이한 부처들의 통합에 의한 의사결정이라기보다는 개별부처 내에서의 환경을 고려한 개발 또는 개발을 고려한 환경이라는 왜곡된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일제 침략기와 6.25전쟁 그리고 서구문명의 도입 과정을 겪으면서 사회조직이 절충과 중용을 통해 최선의 방법을 찾으려는 노력보다는 이분론(dichotomy)적인 사고와 행동을 취해왔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경제적 수단과 시장기구 및 기타 인센티브의 효과적 사용과 환경·경제통합 회계체계의 수립 항목들이 정비되어야 하며, 개발과 보전을 동시에 고려해야 할 정부의 주요정책 및 계획에 대한 사전검토를 할 수 있는 제도장치가 필요하다. 경제발전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지속가능발전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2) 재원조달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재원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며 각 국의 재원은 자국의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조달되어야 한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대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상당량의 재원이 소요되는 바, 이를 위한 재원의 부족으로 인해 지속가능발전에 어려움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예산확충뿐 아니라 모든 경제주체에 대해 환경보전을 유인하면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각종 제도를 도입 시행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제적인 재정지원에 공감하여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경제적 위상에 맞는 지원을 수행해야 하며 민간부문을 통한 재원공급 특히, 해외 직접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ODA 지출액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선진국의 지원 규모와 비교하면 아직도 저조한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 ODA 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국민총생산 대비 0.06%로 개발도상국 요구수준인 0.7%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의 국내 여건상 ODA 비중을 대폭적으로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에 따라 융통성을 발휘하여 적절히 대처해야 할 것이다.

다. 거버넌스(governance)

거버넌스는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말하며 국제적, 지역적, 국가적 차원이라는 3가지 측면을 지니고 있다. WSSD에서는 재원 등 이행수단이 효율적으로 적용되려면 이를 운용하는 주체인 국제기구와 개발도상국 개별 국가의 거버넌스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인식에 따라 이행관리체계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국제적인 수준의 거버넌스 대하여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유엔지속발전위원회(UNCSD)의 역할 강화 등 유사한 의견을 보이고 있으나 개별 국가 수준에서의 건전한 거버넌스(good governance)를 둘러싸고 선진국/개도국의 입장 차이가 분명히 노정되었다. 국별 거버넌스는 재정지원에 대한 개도국의 수용역량문제(투명성, 효율성 등)를 다루고 있으면서 사법제도, 민주주의 등 민감한 문제를 건드리면서 주권침해의 소지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WSSD 준비과정에서의 성과는 정부간 합의 문서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형태의 당사자간 협의를 통한 메카니즘인 파트너십/이니셔티브(type 2)에 관한 논의가 활성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파트너십/이니셔티브는 비공식 논의를 거쳐 이에 관한 성격규정과 가이드 라인을 정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파트너십은 범 지구적으로 합의될 정치적 선언과 이행 계획(type 1)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정치적 공약을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것으로, 자발적이고 자주적(self-organizing)인 성격을 지니게 되며, 상호 신뢰에 기초한 모든 이해 당사자의 참여를 핵심적인 사항으로 분명한 활동주체와 목표, 책임성 그리고 국제적 활동범위 등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중앙의 일방적 지시와 통제에 의한 행정행위는 다원화되고 민주적인 사회의 발전과 효율성을 저해할 여지가 많다고 할 수 있다. 중앙집권적, 권위주의적 행정에서 벗어나 다양한 가치와 삶의 방식을 반영하는 책임행정을 구현해 나가야 한다. 국민·기업·정부간 자율적인 참여와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한 상호협력과 지원 중심의 열린 행정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우리 사회의 개별 행위주체 모두가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지속가능발전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며, 기업이 스스로 환경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도록 하는 자율환경 관리제도를 확산하고, 자치단체 중 지속가능발전을 이행하는데 앞장서는 단체에게 인센티브 제공, 민간환경단체의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 협약 등 200개 이상의 국제환경협약의 체결과 함께 환경을 중심으로 국제정치와 무역질서가 재편되고 있는 이때에 책임 있는 지구촌의 일원으로서 지구환경보전에 능동적 참여가 필요하다. 지구온난화, 생물다양성, 유해폐기물관련 국제협약, 선진국의 무역과 환경의 연계 논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선진국 수준의 환경보호 전략 수립·추진이 필요하다. 환경분야의 외교역량을 강화하여 국제 환경규제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대응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지역환경보전을 위한 지역 및 양자간 환경협력을 주도하여 산성비, 황사 등 월경성 환경문제에 대응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연구 과 제 】

1.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WSSD) 개최되기까지의 진행과정을 유엔지속가능발전위원회(UNCSD) 활동과 연계하여 설명해 보자
2. 빈곤퇴치와 관련된 논의 중 국제적인 이슈와 국내적인 이슈로 분류하여 그 현황과 대응과제를 논의해 보자
3. 인구변화와 지속가능발전의 관계를 조사해 보고 인구 고령화의 영향을 정리해 보자
4.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패턴의 예를 제시해 보고 지속가능발전과 연계하여 고찰해 보자